

# EU Vs EEU: 새로운 지역구도 경쟁 혹은 협력\*

윤성욱\*\*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EU Vs EEU: 경쟁 또는 협력 |
| II. 지역통합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 V. 결론: 경쟁과 협력의 공존       |
| III. EEU의 출범과 영향력   |                         |

## | 논문요약 |

본 논문은 러시아가 주도하여 창설된 EEU의 영향력을 고찰해 봄으로써 EU와 어떠한 형태의 지역구도를 형성해 나갈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EEU 자체적으로는 국제무대에서 EU, NAFTA, ASEAN 등과 견줄 만한 새로운 지역공동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원국의 확대 및 통합의 심화가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EU 확대에 가장 핵심적인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잠재적 후보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의 경우 EEU에 회원국으로 가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의 제3기 집권 이후 EEU 프로젝트가 가장 중요한 대외 정책 의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EEU는 실존하는 지역공동체로서 일정 부분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려 할 것이다.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정치 및 경제적 측면에서, 나아가 EU의 에너지 안보에 있어 EU 대외 정책의 핵심적 국가임을 고려할 때, EU의 대 EEU 대응 정책은 기존의 대 러시아 정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물론 EEU 창설로 ‘공통의 이웃국가 (shared neighbourhood)’들과의 관계 형성을 두고 EU와 경쟁관계 구도가 성립될 요소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EU와 EEU의 지역구도는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U와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상호 중요성을 다분히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경쟁의 요소보다는 협력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임.

\*\* 동아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의 방향으로 EU와 EEU 간 지역구도가 전개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의 한-러 FTA 추진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 구상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EEU의 설립은 한국 정부의 FTA 구상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 수립에 러시아가 아닌 EEU가 대외 정책 수립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 주제어: 유라시아경제연합, 유럽연합, 지역통합, 통합의 확대와 심화, 지역협력과 경쟁

## I. 서론

소위 ‘러시아판 EU’로도 불려지는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이하 EEU)’이 2015년 1월 1일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EEU 출범에 대한 서방의 시각은 러시아와는 사뭇 다르다. 러시아는 EEU 설립의 목적을 지역 국가들 간의 경제통합을 통한 경제개발 및 성장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세력은 ‘구소련의 부활’을 위한 사전 단계가 아니냐는 우려와 이러한 근거로 러시아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태이다. EEU의 회원국이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와 같은 과거 구소련에 속해 있던 국가들이고, 특히 중앙아시아지역 및 CIS의 국가들이 유력한 EEU의 잠재 회원국으로 분류되는 것이 이러한 비판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2년 5월 블라디미르 푸틴이 집권 3기의 러시아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러시아의 대외 정책 기조를 ‘강한 러시아’ 또는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제사회가 러시아에게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직·간접적인 이유이다. 즉, 서방 세력은 러시아가 과거 소련에 속해 있던 국가들을 EEU로 통합하여 새로운 지역공동체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국제관계 질서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러시아는 EEU의 창설이 EU와 같은 지역통합의 일환이며, 지역

경제통합을 통해 경제성장과 같은 효과를 누리기 위함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EEU 출범에 따른 서방세계의 러시아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역점을 두는 것은 EEU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NAFTA, 그리고 주변의 EU, 아시아지역의 ASEAN과 같은 일종의 지역공동체라는 점이다. 미국 등 서방세계가 우려하고 있듯이 과거 소련 국가들을 규합하여 새로운 세력권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EU 등을 중심으로 EEU의 창설에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은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밝히는 EEU 창설의 목표 -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성장 등 - 외는 별개로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EEU의 창설과 출범을 주도하는 데 다른 의도가 있다고 파악하기 때문이다. 둘째, EEU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 소련의 일부에 속했던 국가들이며, 특히 중앙아시아 및 카스피해 연안 국가들의 경우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최근 열강들의 주요 관심 지역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결국 자원 부국인 러시아가 주변의 자원 부국들과 함께 지역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의미이며, 이는 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강력한 지역공동체의 출현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서방 세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방의 우려와 더불어 2014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와 서방 세력 간의 경쟁 양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EEU의 출범은 이러한 지역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미국, EU, 중국 등 세계 열강들이 EEU에 대한 새로운 대외 전략 혹은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을 가지게 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 축소가 불가피해진 미국의 경우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판국이다. 중국의 경우에도 이 지역에서 에너지 자원 확보 등의 경제적 이익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EU는 EEU와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이 지역에서의 불안정성은 EU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특히 전통적으로 러시아가 EU 대외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국가 중 하나라는 점에서 EEU 출범에 따른 새로운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EEU 출범을 계기로 세계 주요 열강 중 EU의 관점에서 EEU와의 관계 형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새롭게 창설된 지역공동체인 EEU가 출범한 이후에 EU와 대립 또는 협력의 관계를 구성할 것인지, 나아가 이러한 새로운 지역공동체의 출현이 새로운 지역구도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도 파악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최근 한국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진다. 우선 II장에서는 지역통합과 관련하여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본 논문에서 도입하는 지역통합의 이론은 ‘통합’ 그 자체에 대한 이론보다는 국가들이 지역통합에 동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상황, 동기 등을 국제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법이 유용한 이유는 EEU에 참여하는 국가들과 특히 러시아가 어떠한 목적으로 지역공동체에 참여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III장에서는 EEU의 출범과 EEU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특히 본 논문이 EU와 EEU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EU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전개하도록 하겠다. IV장에서는 EU의 대 EEU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 EU와 EEU가 어떠한 구도를 형성해 나갈지를 파악하도록 하겠다. 결론인 V장에서는 본 논문의 요약과 함께 EEU의 출현이 어떠한 형태의 지역구도를 형성해 나갈지, 아울러 이러한 지역구도 형성이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도출하도록 하겠다.

## II. 지역통합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1980년대 중반 이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또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 형태의 경제통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다. 다양한 형태의 경

제통합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세계 경제의 구조를 변형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Gilpin(2001)은 1950-60년대의 지역통합이 교역 등의 소수 분야에 한정되어 있던 반면, 최근의 지역통합 움직임은 교역, 금융, 투자 등으로 확대되었고 단순히 지역적 인접성을 넘어 전 지구적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지역통합의 형태적 변화와 더불어 주목할 만한 점은 지역통합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통합들은 각기 상이한 통합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통합을 추구하는 국가들의 목적을 ‘독립의 관리’, ‘상호 의존 관리’, 그리고 ‘세계화의 관리’로 구분한다(Best & Christiansen 2011, 431-2).<sup>1)</sup> 이와 더불어 지역 ‘통합(integration)’은 ‘협력(cooperation)’과 종종 혼재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통합의 경우 제도의 조화(harmonisation of rules)와 같은 조치가 채택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국가 상위의 새로운 통치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유럽통합의 경우 EU 기구들(예: EU 집행위)이 국가를 대신하여 협상에 참여(예: FTA 협상)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회원국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협력을 도모(예: 외교 및 안보 정책)하는 것과 같이 통합과 협력이 분야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Fishlow와 Haggard(1992)는 모든 지역통합이 경제 및 정치적 이유와 연관되어 있지만, 경제와 정치 중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주도(market-driven)’와 ‘정책주도(policy-driven)’의 지역통합으로 구분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서 볼 때 독일을 묶어두면서 국제무대에서 유럽의 위치를 강화할 목적의 유럽통합은 정책주도로, 북미지역에서 자유무역 지대 조성을 목표로 했던 NAFTA는 시장주도의 지역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통합의 과정에서 단일시장을 완성하고 단일통화를 도입했던 것은 시장주도의 통합으로 볼 수

1) Best와 Christiansen(2001)에 따르면, 새로 독립한 국가들의 경우 과거 식민지 국가 혹은 다른 강대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독립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해 지역주의를 선택하며, 다른 국가들과의 상호 의존을 통해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통합을 추구하기도 한다. 아울러 지구화에 대한 지역적 대응을 목표로 하기도 한다.

있고, 미국이 NAFTA를 통해 멕시코로부터의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은 정책주도의 통합이기에 사실상 경제와 정치적 목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제와 정치적 논리의 복합적 상호 작용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경제학 분야에서는 양 논리를 분리하여 지역통합을 설명하는 방법들이 우선적으로 시도되어 왔다. 대표적인 경제적 논리는 신제도주의(neo-institutionalism)와 새로운 정치경제학(new political economy)이다. 신제도주의적 접근은 새로운 제도의 설립으로 인센티브를 통한 국가들의 협력을 도모하고, 제도 속의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거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본다. 새로운 정치경제학에서는 경제적 지역주의를 통한 분배적 결과(distributive consequences)에 주목하는데, 예를 들어 FTA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은 FTA를 통한 이익의 분배를 받을 수 없기에 일반적으로 국가들 사이에서 승자와 패자로 구분되어진다고 본다(Gilpin 2001, 345). 경제적 접근에서 무엇보다도 선구적인 연구는 Viner(1950)의 관세동맹 체결에 따른 ‘무역 전환(trade diversion)’과 ‘무역 창출(trade creation)’ 효과라고 할 수 있다. Viner의 이론이 특히 획기적이었던 이유는 Viner 이론 이전에는 지역경제협정에 참여한 국가와 참여하지 않은 국가 모두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품에 특화함으로써 모두 자유무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비교우위 논리(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Gilpin 2001, 347). 지역통합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경제적 논리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접근법은 지역 경제통합이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sup>2)</sup>

지역통합에 대한 정치적 분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는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유럽통합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이다. 유럽통합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치적 이론은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와 정부간주의(intergovernmentalism)이다. Haas(1957)로 대표되는 신기능주의는 Mitrany(1966)의 기능주의(functionalism) 이론에 근간을 두고 있다(Rosamond

2) FTA 협상 파트너 선택에 있어 정치적 동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윤성욱(2009)의 논의 참조.

2000). 기능주의는 국제협력이 적대감을 낮추고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전제하에 연방주의(federalism)를 비판하고 사안별로 국제협력을 진행하는 ‘기능적 대리체(functional agency)’의 필요성을 주장한다(Mitrany 1966). 반면에 Haas(1958; 1964)는 국내 이익집단 및 정치단체들의 경제적 이익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하위정치(low politics) 부분에서의 기능적 통합이 확산효과(spillover effect)에 따라 정치 및 안보 분야의 상위정치(high politics)로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Keohane(1984)으로 대표되는 신제도주의(neo-institutionalism)는 앞서 경제적 접근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 또는 지역 제도가 국가들로 하여금 공통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도와준다고 본다. 신기능주의의 하위정치, 즉 경제적 이익이 지역통합의 실질적 동기라는 주장과 신제도주의에 따른 지역 제도가 통합과정을 촉진시킨다는 주장을 접목시킨 이론이 정부간주의이다. Hoffmann(1964, 1966)은 유럽통합이 회원국들이 국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결합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현실주의(realism)적 접근 방식과 일맥상통한다. 한편 Moravcsik(1998)는 경제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경제적 의존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 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거시경제 측면에서 선호하는 정책들을 유럽통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들 간에 전략적으로 상호 작용을 하며, 유럽통합은 회원국들의 이러한 상호작용 행위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주의적 관점도 일정 부분에서 정부간주의 접근법과 유사하다. 자국의 이익과 상대적 이익을 중요시하는 현실주의 입장에서 국가 간의 협력, 나아가 통합은 이루기 어려운 목표이며, 이는 회원국들이 유럽통합 과정에서 공동 안보 및 외교정책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Grieco 1997). 결국 현실주의자들이 바라보는 통합은 강대국 주도하에 자국의 이익에 부합 - 예를 들어, 상대적 이익을 늘리기 위해 또는 국가 안보 및 경제적 복지에 대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등 - 하는 측면에서 협력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Gilpin 2001). Woolcock(2003), Ravenhill(2011)과 Damro(2008) 등은 국가들의 지역통합, 특히 RTA 체결의 동인을 정치 및 경제적 측면에서 유형화하였다. 특히

정치적 측면에서 환경 등과 같은 새로운 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이 필요한 경우나 지역통합을 통한 국제무대에서의 교섭력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Ravenhill 2011). Damro(2008)의 분석은 정치적 동인을 7가지 유형으로 보다 구체화하여 국가들이 지역통합에 참여하는 정치적 이유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지역통합과 관련하여 경제 및 정치적 측면의 동인을 분석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어느 하나도 지역통합에 있어 국가들의 의도를 완벽히 설명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러한 점에서 현실주의자인 Gilpin(2001, 359)이 제시하는 ‘절충주의 접근(eclectic approach)’이 상대적으로 적용하기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접근법을 제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지역통합 논의가 - 대부분이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형태의 통합일지언정 - 일정 부분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둘째,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 없이도 최근의 지역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셋째, 경제적 지역주의의 확산에 있어 새로운 경제대국(economic power)의 출현, 국제경쟁의 심화, 신속한 기술 개발 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제 지역주의가 경제적 안보 딜레마(economic security dilemma)에 의해 추진되기도 하며, 끝으로 국제 교역에 있어 전략적 교역 이론, 규모의 경제, 소수 독점 경쟁(oligopolistic competition) 등의 경제적 요인도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역통합에 있어 어떠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중요한 점은 지역통합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이익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이 있음은 자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러시아가 주도하는 EEU의 회원국들 역시 경제 및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EEU는, 러시아를 필두로 EEU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협력 또는 통합의 과정에 들어선 것일까? 다음 III 장에서는 EEU의 형성 과정을 통해 러시아를 필두로 EEU 회원국, 잠재적 후보국들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러시아가 지역통합을 추진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다른 회원국 및 잠재적 후보국들의 EEU에 참여 또는 불참의 근거를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가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EEU가 EU와 함께 새로운 지역구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EEU의 외연적 확대 및 심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 III. EEU의 출범과 영향력

2015년 1월 1일부로 유라시아경제연합 조약(Treaty on the Eurasian Economic Union)이 실질적으로 발효되었다. 러시아를 비롯하여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가 2005년 1월 1일부로 회원국이며, 이 국가들 사이에는 상품, 서비스, 자본 및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다. 조약의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이 세 국가는 2014년 5월 29일 조약에 서명을 마쳤으며, 향후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공화국<sup>3)</sup> - 이미 2014년 10월 및 12월에 각각 조약에 서명 - 이 회원국으로 합류할 예정이다.<sup>4)</sup> EEU의 통치는 회원국의 수장으로 구성된 ‘유라시아 최고 경제 이사회(Supreme Eurasian Economic Council, 이하 SEEC)’에 위임되어 있으며, SEEC는 정부 간 이사회(Inter-governmental Council), 유라시아 경제 집행위(Eurasian Economic Commission, EEC), 그리고 연합 법원(Court of Un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EEU의 거버넌스 및 의사결정 구조 등은 EU와 비교가 되고 있으며, 형식적인 측면에서 상당 부분 EEU는 EU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sup>5)</sup>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향후 EEU가 정치적 기능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통합을 심화하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1억 7천만 명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공동시장, 즉 경제적 측면의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Radio*

3) 키르기스스탄의 공식 명칭은 키르기스공화국(Kyrgyz Republic)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후부터 키르기스스탄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4) EEC (2015), “The Treaty on the Eurasian Economic Union is effective”, <http://www.eurasiancommission.org/en/nae/news/Pages/01-01-2015-1.aspx>. (2015년 1월 25일 검색) 아르메니아는 1월 2일부로 회원국이 되었고, 키르기스스탄은 5월 초에 회원국으로 가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키르기스스탄의 EEU 가입은 5월 말로 연기될 예정이다(Putz 2015).

5) EEU의 통치구조 및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분석과 EU와의 비교는 Popescu(2014)의 논의 참조. 아울러 성원용(2014)은 지역통합의 출발조건, 형성조건 및 거버넌스 차원에서 EEU와 EU의 비교를 시도하였고, EU의 통합 경험을 EEU에 단순 적용시키기는 어렵다는 점과 특히 EEU에서 아직 거버넌스 구조 및 의사결정 측면에서 초국가성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Free Europe Radio Liberty* 2015/02/09). 아울러 아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EEU는 전 세계 면적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GDP는 2조 4천억 달러에 전 세계 천연가스의 20% 및 원유의 15%가 EEU지역에 매장되어 있다(EEC 2014).

<그림 1> Eurasian Economic Union 회원국과 현황



\* EEC(2014, 11)

EEC(2014)의 자료에 따르면 유라시아지역의 경제통합 역사는 20여 년 전부터, 다시 말해 1991년 12월 8일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독립국가 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이하 CIS)에 서명한 이래로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본다. 1996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및 러시아가 경제 및 인도주의 분야에서의 통합 조약에 서명하였고, 이 조약은 1999년 타지키스탄을 포함하여 관세동맹 및 단일 경제 구역(Single Economic Space, 이하 SES)의 창설에 합의하는 조약으로 발전되었다. 2000년에는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ian Economic Community, 이하 EurAsEC)가 설립되었고, 2003년 SES 설립, 2009년에는 단일 관세 공동체 창설을 위한 단계 및 일정을 확립하였다. 특히 2009년에 벨라루스,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정상들은 EEU의 창설을 선언함과 동시에 EU와 공동 경제 구역을 창설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하였다. 2011년 EEU 및 EEC의 창설과 관련한 선언에 공식적인 서명이 이루어지고 EEC는 2012년 2월 12일부로 업무를 개시하였다. 이러한 20여 년에 걸친 통합의 논의와 과정을

거치면서 2015년 EEU는 공식적으로 설립·운영되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출범에도 현재 EEU가 EU 등과 같은 다른 지역공동체에 비해 가지고 있는 존재감과 영향력은 미비하다. 무엇보다도 러시아를 제외하고 경제규모가 작은 소수의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지역공동체로서 EEU의 영향력 확대를 가늠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회원국의 확대 또는 회원국들 간의 관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EEU 회원국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특히 천연자원 관리에 대해 공동정책을 취하기로 함에 따라 풍부한 천연자원은 국제무대에서 EEU의 영향력 행사에 가장 중요하고 경쟁력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벨라루스와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우 러시아가 정치 분야를 통합 논의에 포함시키는데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아울러 EEU의 국제무대에서 지정학적인 역할을 제한함으로써 EU나 ASEAN과 동등한 지역 블록으로 정치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Baldryan 2014).<sup>6)</sup>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는 EEU를 EU와 유사한 성격 및 형태의 지역공동체로 발전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sup>7)</sup> 나아가 지역경제공동체 창설을 계기로 과거 소련에 속했던 국가들과 안보 동맹(economic bloc-cum-security alliance)과 같은 정치적 통합체로 만드는 것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비전이라는 것이다(*The Moscow Times* 2011/11/09).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최근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EU의 대 러시아 제재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EU와 EEU가 공식적인 접촉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으며, 나아가 공동 경제 구역을 유라시아 전역으

6) Baldryan(2014)은 EEU가 국제무대에서 지정학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과거 냉전시대와 같은 동서 간의 대립 구도로 귀결될 수도 있다고 본다.

7) 이와 관련한 러시아의 EU 대사 키즈호프의 EU Observer(2015. 1. 4)와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Our idea is to start official contacts between the EU and the EEU as soon as possible [...]. I think that common sense advises u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common economic space in the Eurasian region, including the focus countries of the Eastern Partnership (an EU policy on closer ties with Armenia, Azerbaijan, Belarus, Georgia, Moldova, and Ukraine). Do you believe it is wise to spend so much political energy on a free trade zone with the USA while you have more natural partners at your side, closer to home?"

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공식적인 러시아의 의도는 지역공동체 창설을 통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지역에서 경제적 측면 이외에도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있어 러시아가 보여준 방식은 벨라루스나 카자흐스탄 등 EEU 회원국들에게 러시아의 영향력이 자국의 내부 정치 및 정책에 개입될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끔 할 수 있다(*EU Observer* 2015/01/02).<sup>8)</sup> 경제적 규모나 지정학적 위치의 측면에서 우크라이나가 EEU 발전에 핵심적인 국가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무력 개입한 이유는 친러시아 대통령 축출 후 우크라이나 정부가 EEU 대신 EU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러시아와 EEU 회원국들 사이에 정책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EEU의 정책 결정이 만장일치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에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특히 러시아와 의견을 달리하는 회원국의 경우 어떻게 러시아의 압력을 견디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미 벨라루스의 경우 러시아가 EU산 농축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EU의 대 러시아 제재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EU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벨라루스는 EU산 제품을 수입하여 재포장 후 러시아 등으로 수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러시아의 수입 금지 조치로 받게 될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회원국들간의 긴장관계는 분명히 EEU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The Moscow Times* 2014/12/11).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거나 EEU 회원국으로 가입이 확정된 국가 이외에 과거 소련에서 독립했던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의 행보에도 러시아가 주목하고 있다. EEU의 출범으로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은 EEU에 의해 둘러싸인 형국이다.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EU나 EEU로의 통합에 대해 어떠한 의도도 밝히고 있지 않지만, EEU 가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팽배하다. 러시아는 아제르바이잔이 ‘구암(GUAM: Georgia, Ukraine, Azerbaijan,

8) *Radio Free Europe Radio Liberty*(2014/12/23)는 Nursultan Nazarba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언급을 인용하여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서방세계로부터 러시아의 고립이 EEU 설립 과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Moldova)’의 다른 국가들처럼 EU와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을 체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sup>9)</sup> 원유 및 가스가 풍부한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 및 EU 모두에게 상대적으로 중요한 국가이다. 따라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역공동체로서 EEU의 확대 및 공고화를 위해서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아제르바이잔의 EEU 가입은 당연한 것으로 본다. 반면에 EU에게는 아제르바이잔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남방유통로(Southern Corridor)’ - 아제르바이잔의 가스를 카스피해에서 러시아를 통하지 않고 유럽으로 수송하는 유통로 - 실현에 핵심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sup>10)</sup> 현재 아제르바이잔의 대 EU 교역량이 2013년 기준 150억 불 정도로 러시아와의 교역보다 3배가 많은 상황이며, EEU 프로젝트가 러시아의 구소련의 재건이 아니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 한 아제르바이잔의 EEU 가입은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Business New Europe Intellinews* 2014/07/18). 한편 조지아와 러시아의 관계는 아제르바이잔의 경우보다 더욱 복잡하다. 2003년 장미혁명을 계기로 친서방 정권이 출범하면서 러시아의 대 조지아 압박정책이 심화되었으며 결국 2008년 양국 간 전쟁이 발발하면서 갈등관계는 최고조에 달했다. 2012년 새롭게 들어선 조지아 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EU와의 협력 구축에도 공을 들이는, 다시 말해 EU와 EEU 사이에서 일종의 균형정책을 모색하고 있다(한홍렬 외 2014). 이러한 측면에서 조지아의 EEU 가입 여부도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

카자흐스탄과 함께 중앙아시아의 맹주 역할을 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가입 여부도 EEU의 확장 및 공고화에 중요한 변수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Islam Karimov) 대통령이 2015년 1월 12일 새롭게 구성된 의회 연설에서 우즈베키스탄은 과거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과 같은 연합체에 결코 가입하지 않을 것이며, 소비에트 시대로의 복귀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Ferghana news* 2015/01/14). 물론 러시아도 우즈베키스탄을 회유하

9) EU는 2014년 ‘동부 파트너십(Eastern Partnership)’의 6개국 중 3개국,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와 제휴협정을 체결하였다(Gromadzki 2015).

10) 주EU대사관 (2011), “EU, 아제르바이잔과 가스공급 공동선언 체결”, [http://missiontoeu.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hbdlegationread.jsp?typeID=15&boardid=10726&seqno=783809&c=TITLE&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http://missiontoeu.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hbdlegationread.jsp?typeID=15&boardid=10726&seqno=783809&c=TITLE&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2015년 4월 24일 검색)

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의 부채 대부분인 8억 9000만 달러를 탕감해 주고 우즈베키스탄 농산물의 러시아 시장 진출에도 합의를 해주었다(*The Moscow Times* 2014/12/10). 이와 동시에,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우즈베키스탄은 EEU와 자유교역 지대(free trade zone) 설립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논의와 푸틴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을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가장 우선적인 파트너 중 하나라고 강조했음에도 사실상 우즈베키스탄의 EEU 가입은 불투명하다(Sorbello 2014).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CIS 지역에서 EEU를 위시로 한 러시아의 세력 확장에 대해 우즈베키스탄은 주권 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국가 안보의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한홍렬 외 2014).<sup>11)</sup>

향후 키르기스스탄이 EEU에 가입을 하더라도 EEU가 확장을 통해 EU에 버금가는 지역통합체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와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국가들의 합류가 필요하다. 에너지 부분에서 EU 입장에서도 중요한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의 가입은 러시아의 대 EU 관계에서 러시아의 협상력을 높여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러한 핵심적인 국가들의 EEU 가입은 불투명하며, 오히려 이들의 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이 우세하다. 러시아가 단순히 경제적 통합이 아닌 정치적 통합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EEU에 가입하는 것이 소련 붕괴 이후 자국의 주권이 러시아에 의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EEU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EEU 전체 GDP의 87%, 인구의 83%를 차지하는 등 러시아에 과도하게 치우친 불균형 상태이다. 이러한 사실은 EEU의 경제정책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다른 회원국들은 부차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Barbashin 2015; Ruff 2015).<sup>12)</sup>

11) 그러나 러시아 외무위원회 소속 상원의원인 모로조프(Igor Morozov)는 인터뷰에서 우즈베키스탄이 2015년 EEU에 가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JTE China* 2015/01/04)

12) 상기 수치는 2014년 12월 러시아 루블화 폭락 이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특히 Barbashin(2015) 및 Ruff(2015)는 독일의 경우 EU 회원국 중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EU 전체 GDP의 15.8%, 인구의 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EEU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막강할 수밖에 없다고

이러한 측면에서 러시아가 독보적인 역할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EEU가 지역공동체로서 외연 확장에 따른 영향력 확대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EU와 ASEAN과 같은 높은 수준의 통합체인 EEU 창설에 대한 의지가 굳건하며 제3기 푸틴 대통령의 대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깊은 통합(deep integration)’은 지속적으로 추구될 수밖에 없다(*The Telegraph* 2011/10/5). 비록 EEU의 단기적 외연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부정적 전망이 제기되고 있지만, 러시아를 주축으로 EEU 통합의 심화가 가속화되고 이를 통한 러시아의 EEU 확대를 위한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EEU는 지역공동체로서 그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EEU의 영향력은 푸틴 대통령이 밝혔듯이 EEU 설립을 통해 EU와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특히 에너지 자원 등을 중심으로 세계무대에서 러시아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sup>13)</sup> 유라시아지역에서 EU와 버금가는 지역공동체로서 자리매김한다는 의미는 소련 붕괴 이후 쇠퇴한 러시아의 위상을 EEU를 통해 복원하고, 결국 EU 및 미국과의 경쟁구도를 형성하여 국제관계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러시아의 지역통합의 목적은 경제적 동기보다 정치적 동기가 우선시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EEU에서 러시아의 시장 규모 및 경제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았을 때 사실상 EEU 창설을 통해 러시아가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높지 않다. 그러나 EEU의 창설을 통해 다극화된 국제무대에서 다른 공동체 - EU, ASEAN, NAFTA 등 - 와 더불어 러시아 중심의 EEU가 유라시아지역에서 주축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EU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EU 대 러시아’가 아닌 ‘EU 대 EEU’ 형태의 지역공동체로서의 관계 설정을 통해 에너지 자원 등을 바탕으로 협상력을 높일 수도 있다. EEU의 잠재 후보국들의 참여 또는 불참

---

주장한다.

13) *The Telegraph*(2011/10/05)에 소개된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일간지 *Izvetia*의 기고문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EEU와 EU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유라시아지역에 지정학 및 지경학(geo-economic)적 상황을 변화시킬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입장에도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깊게 깔려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와의 교역 비중이 높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정치적 관계, 특히 EEU 가입 후 정치적 문제에 있어 러시아에게 자신들의 주권이 침해되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결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경제통합 프로젝트는 경제적 수단을 통한 정치적 동기(political motivation via economic means)가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 IV. EU Vs EEU: 경쟁 또는 협력

2010년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가 관세동맹을 창설하였을 때 이미 EEU 설립의 싹은 자라고 있었다. EEU의 설립으로 EU를 비롯하여 미국 등 서방 세력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상호 경제적으로 이익을 주는 통합이라는 명목하에 러시아의 세력이 강해진다는 것으로, 이는 나아가 NATO 및 특히 EU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가 EEU 전체 경제의 3/4를 차지하고 있음에 EEU의 경제정책은 러시아를 위한, 러시아에 의한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EEU의 설립은 표면상으로는 다자간 창설(multilateral initiative)로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EEU 회원국들과의 양자 관계의 네트워크(network of bilateral relations)로 조직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CIS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치적인 통합으로 확대를 꿈꾸는 러시아의 희망대로 EEU가 확대 및 발전된다면 러시아는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국제관계에서 정치 및 외교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EU 확대를 통해 동구 유럽으로 확대해 나갔던 EU에게 이 지역 내에서 위상의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바로 위와 같은 상황 전개가 EU나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EEU 회원국 구성에 있어 핵심적인 중앙아시아지역에 대한 관심이 최근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주변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전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데다가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중앙



아시아지역이 세계열강들의 에너지 확보를 위한 각축장이 되고 있다. 아울러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중 ‘일대(一帶)’로 불리는 ‘실크로드 경제벨트’가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지역을 통과한다는 사실도 향후 EEU의 대 중국 대외 정책에 주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Tiezzi 2014). 그러나 EU보다 EEU의 설립과 확대에 민감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 이후 중앙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이 축소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최근의 우크라이나 사태 등은 EU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EU의 대외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였다는 사실 때문에 러시아가 주도하고 러시아가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로 탄생한 EEU에 대한 EU의 대응이 더욱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 1. EU의 대 EEU 대응 전략<sup>14)</sup>

2차 세계대전 승전국으로서 소련의 등장은 국제관계, 특히 유럽의 안보 지형을 변화시켰다. 소련에 의한 동유럽 국가들의 공산화는 결국 유럽통합의 단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1991년 소련의 붕괴 또한 유럽통합 및 EU의 대외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EU가 중동부 유럽으로 회원국을 확장하면서 EU는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국경을 접하게 되었고 이는 EU 및 지역 안보에 있어 러시아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의미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러시아와 EU는 상호 중요한 교역 파트너이자 무엇보다도 EU는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EU의 대 러시아 정책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EU가 러시아를 유라시아 대륙의 하나의 축(pillar)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러시아를 EU와 함께 ‘두 강대국(Two-Power)’으로 규정하는 개념을 도입하여 CIS 지역에서 러시아의 역할과 지위를 암묵적으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Dinan

14) IV-1장의 내용은 2014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전략지역심층연구』 14-09의 “EEU 출범과 유라시아 국제관계 변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음을 밝힌다.

1999; 윤성욱 2013; 한홍렬 외 2015).

EU와 러시아는 1994년 ‘동반자협력협정(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이하 PCA)’을 체결하였고 정기적으로 ‘EU-러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협력관계 구축보다 실질적으로 EU와 러시아 관계에 영향을 주었던 주된 요소는 에너지 문제였다. 지난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러시아산 가스 공급을 중단한 사건은 EU에게 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출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게 해주었다. EU의 에너지 공급 다변화에 있어 중앙아시아 지역이 EU에게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한 계기이기도 하다.<sup>15)</sup>

상기 논의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EU의 대 EEU 정책 구상에 대한 전제 조건들의 추출이 가능하다. 첫째, 러시아가 주도하였고 러시아의 절대적 지배력에 의해 운영되는 EEU에 대한 EU의 대응 전략은 결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EU의 대 러시아 대외 정책이 기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관점에서 EEU의 확대 및 공고화의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적·경제적, 그리고 에너지 안보의 측면에서 EU는 러시아를 계속해서 중요하게 인식할 것이 명백하다. 셋째, 최근의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겪으면서 EU의 지역 안보 확립에 있어 러시아는 가장 중요한 대외 변수로 남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EEU에 회원국으로 가입한 또는 잠재적으로 가입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국가들이 EU의 에너지 다변화 정책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들이며, EEU 가입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잠재적 후보군 국가들과의 관계 변화는 EU 및 지역 안보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결론적으로 EU의 EEU에 대한 대응 전략은 EU의 대 러시아 전략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 등이 취해진 상황이지만, 유라시아 대륙에서 EU와 별개의 강대국으로 러시아를 인정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상호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는 정책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물론 러시아 입장에서도 국제무대

15) 그러나 중앙아시아지역에서 EU는 경쟁 상대국인 러시아, 미국, 중국에 비해 경제적 영향력이 낮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그 주된 이유는 1990년대 석유 가격이 낮고 중앙아시아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중앙아시아지역의 에너지 자원에 EU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Promfret 2013).

에서 쇠퇴한 러시아의 위상을 고려하고, 유럽과의 지리적 근접성을 인식하며, 나아가 러시아의 핵심 이익이 무엇보다도 유럽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럽 우선 정책’의 지속을 통한 EU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윤성욱 2013; 한홍렬 외 2015). 정치·경제·안보적 측면에서 EU와 러시아가 서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러시아 주도의 EEU에 대한 EU의 정책은 다소 소극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EEU의 설립에 대해 미국이 ‘경제 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새로운 소련연방을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모습에 비해 EU의 대 EEU 대응 전략이 사뭇 다른 이유이다.<sup>16)</sup> 중앙아시아지역에서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도 러시아가 주도하는 EEU 설립을 계기로 이 지역의 안정이 확립된다면 EEU에 방관자적 입장을 취할 것이다(한홍렬 외 2015). 최근 러시아와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가스 공급 및 고속철도 건설, 그리고 EEU와 실크로드 경제권의 협력을 합의하는 등의 중-러 밀월관계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연합뉴스』 2015/05/08).

EU의 대외 정책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EEU는 EU의 대외 정책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이제 EEU와의 관계 형성은 사실상 EU의 손에 넘어갔다. 2015년 EEU의 출범과 함께 러시아의 EU 대표부 대사인 블라디미르 키즈호프(Vladimir Chizhov)는 EU Observer(2015/01/02)와의 인터뷰에서 EU와 EEU가 공식적인 접촉을 시작할 때이며, 유라시아지역을 아우르는 공동 경제 구역(common economic space) 창설 가능성을 연구할 시점이라고 하였다. 특히 EU가 지리적으로 근접하기에 자연스럽게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러시아를 놔두고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FTA, 즉 환대서양 무역 투자 동반자 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이하 TTIP) 협상에 정치적 역량을 쏟아 붓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sup>17)</sup> 우크라이나 사태

16) 2012년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은 더블린에서 개최된 뉴스 컨퍼런스에서 러시아가 주도하는 EEU는 ‘재 소련화’의 의도가 있으며, 이러한 러시아의 계획을 늦추게 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re is a move to re-Sovietise the region [...] We know what the goal is and we are trying to figure out effective ways to slow down or prevent it.”(*Financial Times* 2012/12/06)

17) 이와 관련한 원문은 앞의 각주 8 참조.

의 원인이 우크라이나가 EU의 ‘동부 동반자(Eastern Partnership)’에 가입하는지 또는 러시아의 EEU에 가입하는가의 문제에서 불거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EU가 EEU의 공식적인 제안을 묵인하기 쉽지 않다. 나아가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 위원인 타티야나 발로바야(Tatyana Valovaya)는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EU와 EEU가 소위 ‘범유라시아 동반자협정(Trans-Eurasian Partnership)’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도 역설한다(Pugsley 2015). 이러한 EEU의 공식적인 제안은 결국 더 이상 러시아가 아닌 EEU가 EU와의 협상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EU의 공식적인 정책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EU의 대응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EU와의 협상에 임한다는 의미는 EU가 공식적으로 러시아가 주도하는 지역통합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며, 새로운 유럽의 질서는 EU와 EEU라는 두 개의 지역통합 프로젝트 간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정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Krastev and Leonard 2014). 이에 대한 반박으로 Vilpisauskas(2015)는 러시아가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EEU에 무역 개방 시스템이 확립되기 전까지 EU는 TTIP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Inozemtsev(2015)는 EEU를 통한 러시아의 의도를 아는 한 EU와 EEU의 동반성장(co-evolution)은 무의미하며 오히려 EU 자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베트남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인도, 이집트 등 30여 개 국가로부터 EEU와의 FTA 체결 제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Lohsen 2015),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정 체결이 가시화되면 결국 EEU가 하나의 지역공동체로 세계무대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 EEU 설립의 어떠한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EEU 존재 자체를 EU 입장에서 부정하기는 쉽지 않은 형국이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전통적이고 전략적인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공격적인 대응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도 빈약하다. 러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은 낮다 하더라도 더 이상 EEU의 다른 회원국들에 대한 EU의 양자적 대응 정책도 바뀔 수밖에 없다. 러시아가 EU와 EEU의 다른 회원국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접촉을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러시아의 관리 아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Menkiszak 2013).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EU는 대 EEU 정책 또는 대

응 전략 구축이 필요하다. 정책 수립에는 우선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러시아에 대한 고려와 중앙아시아 및 CIS 지역의 국가들에 대한 전략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EEU의 정책 결정이 러시아 주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결국 EU의 대 EEU 대응 전략은 기존의 대 러시아 전략과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2. 새로운 지역구도 형성

가능성에 대한 찬반의 논란은 있지만, EEU의 설립은 EU와 서방 세력을 상대로 균형세력(counterweight)이 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이는 특히 러시아가 바라는 의도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The Economist*(2014/05/30)는 EEU의 설립은 최소한 푸틴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EEU가 EU 등과 함께 새로운 지역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로 확대 및 발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해결, 나아가 우크라이나를 EEU에 합류시키는 문제이다. 그러나 최근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상 가까운 장래에 우크라이나를 EEU에 통합시키려는 러시아의 정치적 야심은 성공하지 못 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2014년 9월에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EEU 가입을 지지하는 비율이 17%로 2012년 8월 설문조사의 43%에 비해 현격히 떨어졌다(*Eurobelarus* 2015/02/13). 오히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분쟁을 통해 크림 반도와 돈바스(Donbas) 지역의 친러시아 성향을 가진 주민들을 제외시키고,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러시아 주도의 EEU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 불신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확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포함하여 과거 구소련 지역의 국가들을 신속하게 EEU에 합류시키는 것은 푸틴 대통령의 EEU 프로젝트 완성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다. 이는 유라시아 지역통합이 매력적인 프로젝트임을 서방 및 잠재적 후보 국가에 선전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 확장을 통한 통합 과정의 존속을 과시하고 중

국에는 잠재적 EEU 후보 회원국들이 다른 지역통합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Secrieru 2014).<sup>18)</sup> 그러나 최근 일련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상 잠재적으로 EEU에 회원 후보국들이 러시아가 주도하는 EEU에 합류할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졌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갖는다(Secrieru 2014). 아울러 러시아가 EEU 가입을 요청한 일부 국가 - 가령, 우즈베키스탄과 아제르바이잔 - 에서는 EEU 가입이 자국의 경제적, 정치적 자치권에 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EEU의 심화와 확대(deepening and enlargement) - 즉, 회원국 확대와 통합의 심화 - 를 통한 국제무대에서 새로운 지역구도 형성이라는 푸틴 대통령의 목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EEU의 확대가 늦어질수록 구소련지역에서 중국과 EU의 경제적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EEU의 회원국 확대를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Popescu 2014).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 EEU 확대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지만 러시아 주도의 EEU 통합의 심화와 이를 통한 확대 정책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EEU 확대 계획은 EEU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을 강화하는 데 있다. 푸틴 대통령은 2011년 Izvestia에 기고한 글에서 EEU가 단순히 구소련지역의 재통합이 아닌 EU, NAFTA, ASEAN 등과 동등하게 다극화(multipolar) 무대에서 영향력 있는 하나의 지역 블록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Popescu 2014). EU와의 관계만을 놓고 볼 때에도 EEU 자체를 러시아의 대외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여 EU의 동부지역 협력 국가들을 상대로 EU와 지역공동체로서 경쟁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 형성 국면을 고려하면 앞서 언급한 EEU 확대에 중요한 국가들 -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등 - 과 관계 형성 및 발전은 EU에게도 중요한 대외 정책 과제라는 의미이다. 물론 EU가 이 국가들의 EU 회원국으로의 가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지언정 지역 안보 및 에너지 등의 관점에서 이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는 불가피하다. 이는 결국 러시아가 이 국가들을 EEU에 가입시키려

18) 이러한 관점에서 Secrieru(2014)는 러시아가 키르기스스탄과 아르메니아가 EEU에 회원국으로 합류하는 데 있어 사실상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관점에서 강력히 추진하였다고 본다.

는 정책과 상충되며 불가피한 경쟁구도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EU의 대외 정책의 한계<sup>19)</sup>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EU는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방관자(wait and see)적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Popescu(2014)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의 EEU 가입 제안을 거부해 왔고, 아제르바이잔과 우즈베키스탄도 EU의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 제안뿐만 아니라, EU의 개입 없이도 러시아의 EEU 가입 제안을 반대한 것처럼 EEU 창설에 대한 지정학적 중요성을 과장하는 것이 오히려 EU와 EEU의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EEU 프로젝트가 제3기 푸틴 대통령의 대외 정책의 주요 목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실패와 성공 여부를 떠나 EEU의 확대 및 심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EU가 지속적으로 대 러시아 관계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가 주축이 된 EEU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갈지이다.<sup>20)</sup> EU에게 러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하면 어떠한 수준과 방식으로든 EEU를 유라시아지역의 지역공동체로 인정하는 EU의 정책이 강구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러시아와 EU 모두 경쟁구도를 조성하지는 않겠지만, 유라시아지역, 나아가 국제관계에서 EEU의 등장으로 인한 구도 변화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러한 점에서 푸틴 대통령은 EEU를 통해 소기의 외교적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다.

## V. 결론: 경쟁과 협력의 공존

본 논문은 러시아가 주도하여 창설된 EEU의 영향력을 고찰해 봄으로써 특히 EU와 어떠한 형태의 지역구도를 형성해 나갈지를 분석하였다. EEU 자체적으로는 국제무대에서 EU, NAFTA, ASEAN 등과 견줄 만한

19) EU의 대외 정책의 한계에 대해서는 윤성욱(2014)의 논의 참조.

20) Popescu(2014)는 EU가 (1)EEU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2)EEU와 낮은 수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거나 또는 (3)완전한 형태로 EEU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선택이 있으며, 이러한 세 가지 선택을 혼합하여 대 EEU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새로운 지역공동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원국의 확대 및 통합의 심화가 절실하다. 그러나 EEU 확대에 가장 핵심적인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잠재적 후보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의 경우 EEU에 회원국으로 가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된다. 아울러 EEU 내부적으로도 러시아와 다른 회원국들 사이에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불협화음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의 제3기 집권 이후 EEU 프로젝트가 가장 중요한 대외 정책 의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EEU는 실존하는 지역공동체로서 일정 부분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려 할 것이다. 아울러 러시아는 EEU 통합의 심화를 가속화하고 이를 통한 EEU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이 공공연히 EU와 EEU를 아우르는 경제 공동체 건설을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EU도 대 EEU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정치 및 경제적 측면에서, 나아가 EU의 에너지 안보에 있어 EU 대외 정책의 핵심적 국가임을 고려할 때, EU의 대 EEU 대응 정책은 기존의 대 러시아 정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물론 러시아 입장에서라도 최소한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해서라도 기존의 '유럽 우선 정책'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EEU는 유라시아지역에서 지역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점차 늘려 나가게 될 것이며, 결국 국제무대에서 에너지 자원 등을 바탕으로 EEU, 그리고 러시아의 대외 협상력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EEU 창설로 EU와 경쟁관계 구도가 성립될 요소도 있다. 새로운 세력 구도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변수는 소위 '공통의 이웃국가(shared neighbourhood)'들과의 관계이다. EU와 러시아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전략적 중요성을 상호 인정하는 관계로 유지될 것이나, EU와 특히 EEU의 가입 제의를 거절하고 있는 국가들의 행보에 따라 EU와 EEU 관계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적 규모나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는 계속적으로 러시아와 EU 양측의 가장 큰 관심 국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Dragneva & Wolczuk 2012).

결론적으로 EEU의 설립은 새로운 지역구도 형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최소한으로는 EU와 맞닿은 지역에서 EU와 EEU의 형국으로 구성될



것이며, EEU의 발전 정도는 국제관계 지형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EU와 EEU의 지역구도에서는 본 논문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경쟁과 협력이 공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U와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상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경쟁보다는 협력의 방향으로 EU와 EEU 간 지역구도가 전개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러시아가 요구하는 EU와 EEU 사이의 자유무역지대를 위한 협상 개시와 같은 급진적인 협력관계 구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U는 현재 미국과 TTIP 협상을 진행 중이며, 미국의 입장에서는 EU와 EEU의 관계 개선을 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EU의 설립과 발전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 구상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EU가 대 EEU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와는 다르지만,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EEU의 행보를 주목해야만 한다. 교역 및 남북문제 해결과 에너지 수급 등 다방면으로 한국의 대외 정책에 중요한 러시아를 포함하여,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에 속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EEU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3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한-러 FTA 협상 재개를 결정했다(『서울경제』 2013/05/21). 이와 연계하여 같은 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 구상을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어느 부분에서도 구체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러시아가 주도하는 EEU의 설립은 한국 정부의 FTA 구상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가 생겼다는 의미이다. 즉, 러시아가 아닌 EEU가 대응전략 수립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우 '일대일로' 정책에 있어 EEU와 협력관계 구축을 합의하였고, 중앙아시아지역에서 자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막대한 자본력과 지리적 근접성 등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동일한 대 EEU 전략 수립은 가능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한국 정부의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다. EEU와의 FTA 추진 등도 EEU에 대한 미국 등의 인식을 고려할 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다. 대 EEU 정책의 부재는 현 정부의 주요 대외 정책 중 하나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 구상을 사장시

키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과 EEU 회원국들 간의 산업협력 방안 등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의 협력방안 구축이 관계 형성 및 발전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는 EEU 회원국들이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적 산업육성에 있어 한국의 산업과 전략적 협력 방안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EEU에 대한 대외 정책의 수립 등과 같은 거시적 측면의 정책 구상보다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보다 특정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 구축 등과 같은 미시적 분야에서 EEU와의 협력 방안을 구축해 나가는 전략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정책 마련도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 | 참고문헌 |

- 성원용 (2014).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의 성과와 한계: EU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21권. 제4호, pp. 111-140.
- 윤성욱 (2009).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파트너 선택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국제정치논총』. 49집. 4호, pp. 107-138.
- \_\_\_\_\_ (2013). “제3기 푸틴 정부 출범이후 러시아-EU 관계 변화: 협력에서 갈등으로.” 『국제지역연구』. 17권. 4호, pp. 69-96.
- \_\_\_\_\_ (2015). “유럽연합 대외 정책의 제약과 한계: 대 중앙아시아 정책을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12권. 1호, pp. 87-109.
- 한홍렬·박정호·윤성욱·조혜경 (2014). 『EEU 출범과 유라시아 국제관계 변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Alexandrescu, Mihai (2007). “Devaid Mitrany: From Federalism to Functionalism.” *Transylvanian Review* Vol. 16. No. 1, pp. 20-33.
- Best, Edward & Christiansen, Thomas (2011). “Regionalism in international affairs.” in John Baylis et al. (ed.). *The Globalisation of World Pol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428-442.
- Damro, Chad (2006).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Jackson, John H. (ed.).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the WTO Legal Syste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23-42.
- Dinan, Desmond (1999). *Ever Closer Union: an Introduction to European Integration*. London: Palgrave Macmillan.
- Dragneva, Rilka & Wolczuk, Katarzyna (2012). “Russia, the Eurasian Customs Union and the EU: Cooperation, Stagnation or Rivalry?” *Chatham House briefing paper*. London: Chatham House.
- EEC (2014). *Eurasian Economic Integration: Facts and Figures*, Library of Eurasian Integration.
- Fishlow, Albert & Haggard, Stephan (1992). *The United States and the Regionalisation of the World Economy*. Development Centre Documents. Paris: OECD.
- Gilpin, Robert (2001). *Global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rieco, Joseph (1997). “Systemic Sources of Variations in Regional Institutionalisation in Western Europe, East Asia, and the Americas.” in

- Edward D. Mansfield & Helen V. Milner (ed.).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rinadzjum Grzegorz (2015). "The Eastern Partnership after five years: Time for deep rethinking." Directorate-General for External Policies of the Union, European Parliament.
- Haas, Ernst (1958). *The Uniting of Europ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Forces, 1950-1957*.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64). *Beyond the Nation State: Functionalism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Hoffmann, Stanley (1964). "The European Process at Atlantic Crosspurposes."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Vol. 3. No. 2, pp. 85-101.
- \_\_\_\_\_ (1966). "Obstinate or Obsolete? The Fate of the Nation State and the Case of Western Europe." *Daedalus*. Vol. 95. No. 3, pp. 862-915.
- Inozemtsev, Vladislav (2015). "Why should the EU cooperate with the EEU?" *ECFR Commentary*. London: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Keohane, Robert (1984).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rastev, Ivan & Leonard, Mark (2014). "The New European Disorder." *ECFR Essays*. London: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Menkiszak, Marek (2013). "Greater Europe: Putin's Vision of European (dis)Integration." *OSW Studies*. No. 46. Warsaw: Centre for Eastern Studies.
- Mitrany, David (1966). "The Prospect of Integration: Federal or Functional."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Vol. 4. No. 2, pp. 119-149.
- Moravcsik, Andrew (1998). *The Choice for Europe: Social Purpose and State Power from Messina and Maastricht*.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Popescu, Nicu (2014). "Eurasian Union: the real, the imaginary and the likely." *Chaillot Papers*. No. 132. Paris: European Union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 Promfet, Richard (2013). "Central Asia: Landbridge between East Asia and the EU, or stuck in the middle?" Paper to be presented in a session on Asia and its external relations at the America Economic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in Philadelphia. January 4.
- Pugsley, Sophia (2015). "How Moscow would like Europe to see the EEU."

- ECFR Commentary*. London: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Ravenhill, John (2008). "Regionalism." in Ravenhill, J. (ed.). *Global Political Econom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73-209.
- Rosamond, Ben (2000). *Theories of European Integration*.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 Sorbello, Paolo (2014). "Yes Uzbekistan is Putin's Friend." *The Diplomat*.
- Tiezzi, Shannon (2014). "China's New Silk Road Vision Revealed." *The Diplomat*.
- Viner, Jacob (1950). *The Customs Union Issue*. New York: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Vilpisauskas, Ramunas (2015). "Should the EU recognise the Eurasian Economic Union as a negotiating partner?" European Leadership Network.
- Woolcock, Stephen (2003). "The regional dimension: European Economic Diplomacy." in Bayne, Nicholas and Woolcock, Stephen (ed.). *The New Economic Diplomacy: Decision-Making and Negotiation i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Hampshire: Routledge, pp. 197-214.
- "한-러 FTA 5년 만에 재추진: 신북방정책 편다." 『서울경제』. 2013년 5월 21일.
- "푸틴-시진핑 EEU·실�크로드 경제권 협력 다짐." 『연합뉴스』. 2015년 5월 8일.
- "Azerbaijan keeps its options open." *Business New Europe Intellinews*. July 18, 2014.
- "Clinton vows to thwart new Soviet Union." *Financial Times*. December 6, 2012.
- "President Karimov: Uzbekistan would never enter union like the former USSR." *Ferghana news*. January 14, 2015.
- "Russian Senator: Uzbekistan can join EEU in 2015." *ITE China*. January 4, 2015.
- "Why is EU annoyed about Kremlin's fantasy called the Eurasian Economic Union(EEU)?" *ALTNEWS*. January 22, 2015.
- 주EU대사관 (2011). "EU, 아제르바이잔과 가스공급 공동선언 체결." [http://missiontoeu.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hbdlegationread.jsp?typeID=15&boardid=10726&seqno=783809&c=TITLE&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http://missiontoeu.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hbdlegationread.jsp?typeID=15&boardid=10726&seqno=783809&c=TITLE&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2015년 4월 24일 검색)

- Baldryan, Ruzanna (2014). "The Grand Chessboard 2.0." Pike & Hurricane. <http://magazine.ufmalmose.se/grand-chessboard-2-0/>. (accessed on December 20, 2014)
- Barbashin, Anton (2015). "The Eurasian Illusion: The myth of Russia's Economic Union." Foreign Affairs.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russian-federation/2015-01-15/eurasian-illusion>. (accessed on April 14, 2015)
- EEC (2015). "The Treaty on the Eurasian Economic Union is effective." <http://www.eurasiancommission.org/en/nae/news/Pages/01-01-2015-1.aspx>. (accessed on January 25, 2015)
- EU Observer (2015). "EU talks with newly born Eurasian Union." <https://euobserver.com/economic/127081>. (accessed on January 9, 2015)
- Eurobelarus (2015). "EEU: A threat to restore Cold War system of geopolitical blocks or a chance of peace in Ukraine?" <http://enews.fergananews.com/news.php?id=2909>. (accessed on April 15, 2015)
- Lohsen, Andrew (2015). "Officials cling to dream of Ukrainian membership in Kremlin-led EEU." <http://www.eurasianet.org/print/72561>. (accessed on May 2, 2015)
- Putz, Catherine (2015). "Kyrgyzstan Delays joining the Eurasian Economic Union." *The Diplomat*. <http://thediplomat.com/2015/05/kyrgyzstan-delays-joining-the-eurasian-economic-union/>. (accessed on May 2, 2015)
- "Eurasian Union's Future Murky as Belarus Tensions Simmer." *The Moscow Times*. December 11, 2014. <http://www.themoscowtimes.com/business/article/eurasian-union-s-future-murky-as-belarus-tensions-simmer/513174.html>. (accessed on January 7, 2015)
- "Kyrgyzstan Signs EEU Deal as Divisions Emerge in new alliance." *Radio Free Europe Radio Liberty*. December 23, 2014. <http://www.rferl.org/content/kyrgyzstan-signs-eurasian-union-deal/26759237.html>. (accessed on March 1, 2015)
- "Putin's Vision to become a Post-Imperial Leader." *The Moscow Times*. November 9, 2011. <http://www.themoscowtimes.com/sitemap/free/2011/11/article/putins-vision-to-become-a-post-imperial-leader/447386.html>. (accessed on May 6, 2015)
- "Russia Cozies up toe Uzbekistan with \$865 million debt write-off." *The Moscow Times*. December 10, 2014. <http://www.themoscowtimes.com/business/>

article/russia-cozies-up-to-uzbekistan-with-865-million-debt-write-off/513096.html. (accessed on May 3, 2015)

“Vladimir Putin’s Eurasian Union: excerpts.” *The Telegraph*. October 5, 2011.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europe/russia/8806748/Vladimir-Putins-Eurasian-Union-excerpts.html>. (accessed on April 5, 2015)

“What’s the EEU and What are its Chances?” *Radio Free Europe Radio Liberty*. February 9, 2015. <http://www.rferl.org/content/russia-belarus-kazakhstan-urasian-economic-union-explainer/26773819.html>. (accessed on February 12, 2015)

| 논문투고일 : 2015년 05월 14일 |

| 논문심사일 : 2015년 06월 04일 |

| 게재확정일 : 2015년 06월 16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2, No. 2 (2015)

**EU Vs EEU:**  
**Competition or Cooperation for a new regional structure**

**Yoon, Sungwook**

(College of International Studies, Dong-A Univ.)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the possible change of regional structure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the newly established Eurasian Economic Union(EEU) led by Russia. It is necessary for the EEU to enlarge its member states as well as to deepen its integration in order to be internationally recognised as a new regional community similar to the EU, NAFTA and ASEAN. Nevertheless, the possibility that potential candidate countries including Ukraine as perceived the most essential country for the EEU could join in the near future does not seem to be high. Having considered that the EEU project has been the most important foreign policy agenda since Putin's 3rd Presidential terms, however, the EEU continues to play and extend its role as an existing regional community. Russia has been one of key countries for the EU's external relations in terms of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 as well as the EU's energy security. In this sense, the EU's external policy to the EEU is unlikely to be different from the EU's policy to Russia. There is, of course, a factor which could cause regional rivalry situation between the EU and the EEU, in that shared neighbourhood in Central Asia and CIS categorised as potential candidates to either the EU or the EEU. From these perspectives, the regional structure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EEU is likely to show the coexistence of 'regional cooperation' and 'regional rivalry'. However, both the EU and



the EEU could give priority to 'regional cooperation' rather than rival structure, in that both realise strategic importance of each other. This paper can als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initiatives on the promotion of the Korea-Russia FTA and 'Eurasian Initiative' project. That is, the EEU instead of Russia becomes an objective or a negotiating partner to be considered when Korea sets up its external policy.

- Key words: Eurasian Economic Union, European Union, Regional Integration, Enlargement and Deepening of integration, Regional Cooperation and Rivalry